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22.(화) 12:00
(지 면) 2026. 9. 23.(수) 조간

보훈심사부터 치안 현장까지... AI로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추진

-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 분야 6개 분야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촉진
- 자료 검색·문서 작성 부담 줄여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 AI 서비스로 달라질 행정 서비스 >

>> “복잡한 규제 정보, AI가 돕고 공무원이 세심히 상담합니다.”

소규모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이OO 씨는 그동안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AI 시스템을 활용해 이 씨의 상황에 딱 맞는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은 AI 덕분에 방대한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여, 더 섬세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 씨는 정확한 안내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가게 단장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보훈심사, 기다림과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보훈 심사를 신청한 김OO 씨는 ‘자료는 제대로 냈을까, 결과는 언제 나올까’ 걱정하며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여러 번 문의하곤 했다. 앞으로는 심사 결과를 오래 기다리며 마음을 줄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AI가 제출 자료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와 유사 사례를 정리해 담당자의 심사를 도우면서, 김 씨는 기다리는 부담을 덜고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심사와 치안 현장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6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6개 사업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및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줄여 인공지능(AI)의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생활 지원) 국민 곁으로 더 빨리, 보훈심사·경찰 현장에 인공지능(AI) 지원

먼저, 보훈심사를 기다리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마련한다.

국가보훈부는 제출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검색과 검토서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줄여 담당자가 개별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판례·매뉴얼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한다. 모바일 업무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을 돕는다.

>> (경제활동 지원) 발주 준비부터 규제 확인까지, 인공지능(AI)이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준비와 창업·영업에 필요한 규제 정보 확인도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안요청서 초안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고 법·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발주 담당자의 문서 작성 부담을 덜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발주 과정의 오류와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영업 관련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제 정보를 찾는 국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줄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고 안내하도록 지원하며, 규제 건의와 기존 사례를 분석해 관련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효율성 제고) 인사·감사 업무, 인공지능(AI)으로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부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인사·감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덜고 핵심 쟁점 판단과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제출서류의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사례 검색과 결과 문서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사 분야를 비롯해 여러 행정 분야의 심사·심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도 유사 감사사례와 처분 기준을 찾아 주요 쟁점 분석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 착수부터 결과 작성과 처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원갑	(044-205-2702)
		담당자	사무관	박인창	(044-205-2489)
	국무조정실 규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정호	(044-200-2430)
		담당자	사무관	고유미	(044-200-2406)
	인사혁신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책임자	사무관	김병원	(044-201-8156)
		담당자	주무관	이희진	(044-201-8155)
	조달청 디지털조달총괄과	책임자	사무관	신재욱	(042-724-7516)
		담당자	주무관	고운혁	(042-724-6349)
	경찰청 치안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총 경	이동환	(02-3150-2041)
		담당자	경 사	김형호	(02-3150-3206)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책임자	서기관	신인수	(044-202-5426)
		담당자	사무관	전태욱	(044-202-5279)
	부산광역시 감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현정	(051-888-1660)
		담당자	주무관	윤소윤	(051-888-1684)

행정안전부

AI를 통해 판단과 현장 중심으로 업무가 바뀌어요

**보훈심사부터 치안 현장까지...
SI로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조달청 #경찰청 #국가보훈부 #부산광역시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AI · 빅데이터
분석기반 보훈심사
지원시스템**

국가보훈부

난이도 기반 심사 자동 배정 및
유사 심사 사례 자동 매칭

심사 필수 정보 추출,
심사검토서 및 제안서 자동 생성

회의록 및 의결서 자동 교정,
SI기반 심사결과 예측

**RAG 기반
치안현장
AI 어시스턴트**

경찰청

경찰 매뉴얼·형법·허급심 판례 등
DB 구축으로 근거 정확성 향상

현장 경찰관 치안 상황 질의를 통한
AI기반 최적 의사결정 지원

경찰 내보발 연동된 모바일 오피스로
현장 경찰관 즉각 활용 지원

행정안전부

**공공SW
AI 책임형 발주관리
플랫폼**

조달청

SW사업 유형별 맞춤형 RFP 초안
자동생성 및 요약기능 제공

RFP 요구사항 추출 및 분석,
기능점수(FP) 기반 산출내역서 작성

생성형 AI기반 SW진행법 등
RFP 법제도 위반 여부 자동점검

**지능형
AI규제정보
분석 시스템**

국무조정실

법령정보 및 기본 심사 사례 기반
유사사례와 검토 기준 추천

규제 건의 및 기존 규제 개선
사례 기반 유사·중복 규제 탐색

지역별·창업·영업 정보 등
수요자 맞춤형 통합정보 챗봇 제공

행정안전부

**범정부
심사·심의·검토
업무지원시스템**

인사혁신처

업무 자동화 체계, 규정 매핑, 결과문서
양식 등 AI 에이전트 기반 구축

제출서류 검토, 행정 도출, 문서작성 등
심사·심의·검토 전 과정 지원

맥락 기반 유사 사례·관련 규정
종합 검토 지능형 검색 기능 제공

**스마트
감사행정
지원시스템**

부산광역시

최근 감사 자료 AI 분석을 통해
감사 처분 결과 및 양정 기준 추천

생성형 AI 활용 감사자료 자동 분석 및
주요 행정 도출 기능 제공

감사 단계별 대시보드 시각화,
결과작성 및 처분 관리 등 전주기 지원



규제 검토 한 건, 보존심사 한 건, 경찰치안 한 건
행정 업무 지연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AI가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사례 검토 및
서류 작성 업무를 대신하여,

공무원이
서류가 아닌 국민을 마주하고,
국민이
기다림 대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겠습니다.

